

쟁점(1): 한미 FTA와 한국경제

## 미국과의 FTA로 성장동력 확충해야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한미 FTA 협상 2006년 우수 정책과제로 선정

새해 벽두부터 한미 FTA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1월 15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한미 FTA 제6차 협상이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고, 이를 계기로 찬반 논쟁이 가열될 것이다. 필자가 정책위원장으로 있는 바른FTA실현본부, 선진화국민회의 등 중도보수단체들은 한미 FTA 협상타결을 주장하고 있고, 범국본을 중심으로 반대론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양측은 협정의 대부분 이슈에 대해 강도 높게 논의해 왔고, 상대방의 입장을 상당 수준 파악한 상태이다. 이제부터는 협상 마무리 단계로 서로 주고 받을 리스트를 확정해야 하며, 경제 및 정치안보적 시각에서 미국과의 FTA 가치를 평가할 시점이다.

2006년 우리 정부의 정책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한미 FTA 추진이었다. 비록 협상이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

운 국내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시작했다는 점에 후한 점수를 준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계는 미국과의 FTA 협상 타결이 내년도 최대 경제정책과제로 보고 있으며,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06년말 기업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인들이 바라보는 2007년 한국경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인들은 2007년 우리경제의 최대 이슈로 ‘경기회복 여부’(70.3%)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 ‘한미 FTA협상체결 여부(55.0%)’를 들었다. FTA 타결이 ‘환율안정 여부’(43.2%), ‘부동산가격안정 여부(36.0%)’, ‘유가 및 원자재가격 안정 여부(33.3%)’보다 더 큰 시급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응답자의 73.0%는 한미 FTA가 금년중에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우리나라는 FTA 지각생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 이익, 경제선진화 및 정치외교적 목적에서 FTA를 체결하고 있다. FTA의 장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국가들의 노력으로 인해, 이미 전세계적으로 200개 이상의 협정이 발효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FTA 체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교역의 존도가 높고, 수출업이 없는 경제성장이 불가능한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보다 앞서 많은 교역국가와 FTA를 체결했어야 하지만, 광범위하게 유포된 보호주의적 인식을 극복하지 못해 다른 국가의 FTA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미국과의 FTA는 2003년 우리 정부가 “FTA 추진로드맵”을 작성하면

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당시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진전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2004년 우리 통상당국은 양자간 FTA 논의를 위해 미국과 본격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 상반기에 한미 양국은 FTA 실무자협의를 3차례 개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양측은 2006년초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되었다. 양국은 5차 협상을 2006년 12월 미국 몬테나 주에서 개최하였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FTA 협상을 종결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미국과의 FTA로 경제활로 모색

FTA 대상국으로 미국을 평가하면, 미국은 사실상 우리나라 제1위 경제협력 대상국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고급화된 대규모 소비자 집단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국시장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미국시장에서 히트 친 제품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높은 소비자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 기업인들이 미국과의 FTA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와의 FTA 공식추진을 결정했던 2005년말 당시 25개 국가가 미국과의 FTA 협상을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우리 제조업계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미국은 중국과 더불어 가장 유망한 FTA 대상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조사대상 절대다수 기업들이 미국과의 FTA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FTA 체결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었으나, 중소기업들 역시 미국과의 FTA를 선호하고 있다.

FTA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안정적인 해외시장의 확보, 개방을 통한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측면이 더 우세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생산성 증대효과가 전체 경제에 확산되고 제조업과 서비스분야가 연계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미국과의 FTA로도 5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하는 연구기관(KIEP)의 보고서도 있다. 중국, 일본 및 아세안과의 FTA가 완료될 경우 고용창출 규모는 더 확대될 것이다. 이들 4개 지역과의 FTA 이행 과정에서 단기적인 실직 우려도 10만명 이상이 될 수 있지만, 순 고용창출은 이보다 몇 배 더 많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보다 안정된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금년 4월부터 발효될 무역조정지원제도이다.

### 피해산업 및 실직근로자 지원체계 구비

하지만 경제이익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이면에는 개방확대로 인한 취약산업 구조조정 압력이 가중되는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농업의 경우, 대미국 수입이 증가하게 되어 국산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농가경제를 더 어렵게 할 것이다. 2004년 정부는 농업분야에 대한 119조 지원안을 확정하여 이행중에 있다.

2004년부터 정부는 산업계, 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FTA 무역자유화로 인한 지원대책 마련을 검토하였다. 이에 대한 공청회가 2005년 8월 개최되었고, 2006년 4월 무역조정지원법으로 제정되었다. 반대론자들은 준비없이 미국과의 FTA를 추진했다고 비난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추정하고 협상개시전에 지원법률까지 제정했음을 알아

야 할 것이다. 지원내용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상' 보다는 '현실'에 근거한 지원이 불가피하다. 즉,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실직자에게 넉넉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보조금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다자규범을 위배하지 않아야 하고,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 건설적인 찬반 논쟁 벌여야

협상이 중반으로 접어든 현재 시점에서는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논의가 협상이슈별로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비해, 아직도 미국과의 FTA에 대한 원론적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반대주장 중 일부는 타당할 수 있으나, 많은 경우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들 이슈에 대해 정부도 설명자료를 내놓고 있으나, 찬반 진영의 주장과 설명을 들어보면 워낙 시각차가 커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자료의 공급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내용에 대해서도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될 수 없는 사안인데 반대주장 근거로 활용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붕괴, 미국 대학시험(SAT)의 우리 수능고사 대체, 대학 등록금 인상 등 사실(fact)이 아닌 사안임에도 일반국민들의 불안을 야기시키는 내용으로 한미 FTA를 반대하고 있다. 금년초 정부가 미국과의 FTA 추진 입장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홍보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졸속협상', '굴욕적 협상' 등의 용어가 아직도 유포되고 있는데, 정부의 FTA 협상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그동안 미국과의 다수 통상현안이 발생했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일방적인 요구를 했던 시절이 있었다. 통상현안의 일부의 우리 제도와 관행의 낙후로 인해 제기된 것들이었고, 대부분 우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통상마찰을 회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거 컬러TV분쟁과 같이, 미국 업체의 지나친 제소로 야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여 대미국 통상분쟁을 승리한 바도 적지 않다. 또한 도하개발의제(DDA)와 같은 WTO 다자간 협상에서도 미국의 입장 관철이 용이하지 않다.

한미 FTA 반대논리의 하나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하지만 양국의 출발선이 동일하다면 형평성 주장이 공감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은 개방도가 높고, 규제가 가장 작은 국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와 위상에 비해 보호적이고 규제가 많은 상황이다. 미국과의 FTA에서 우리나라가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FTA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 정부의 FTA 추진 배경이 바로 규제를 철폐하고, 경제제도를 선진화시키는데 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과의 FTA 체결시 국내 법 개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미국과의 FTA 체결시 우리나라 법률 1,670개중 60-70개, 최고 100개를 개폐해야 하는데 비해, 미국은 수정할 법이 없으므로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불평등한 협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극히 정치적인 계산법이다. 그만큼 우리 제도와 관행이 뒤떨어져 있다는 증거로 봐야 한다. 법 개정 숫자로 비교하기 보다는 정말로 우리 경제에 해악이 되는 경우를 제시하고, 정부측에 검토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국익에 보탬이 될 것이다. 의료와 교육이 협상

에 포함되어 개정되므로써 낙후된 우리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이루지 못한 점이 아쉽다.

또한 반대론자들은 우리나라와 미국을 동일시하고, 미국과의 FTA에서 제기되는 쟁점에 대해 “1:1”로 비교하곤 한다. 선진 통상 및 경제제도를 가진 미국도 분야에 따라 자국 기업에 유리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이 우리가 제기하는 제도 개선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한미 FTA가 의미없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호주, 캐나다 등 10개 이상 국가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자국 뜻대로 미국의 제도를 수정시킨 사례는 없다.

우리보다 15배나 큰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수입의 20% 이상을 흡수하는 미국경제는 상호 시장개방 그 자체로도 FTA 상대국에게 큰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FTA 협상을 먼저 제안했음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통상체제는 전세계에서 사례가 없는 독특한 구조이며, 행정부보다는 의회가 통상정책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따라서 협상을 담당하는 행정부는 의회가 미리 정해진 형태의 협정을 추진하게 되고, 상대국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미국과 협상을 추진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 협상 타결을 위하여

FTA 협상은 양국의 국익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며, 일방적으로 내주는 협상은 있을 수 없다. 일방이 지나친 요구를 계속하게 되면, 그

협상은 진전되기 어렵다. 어디까지나 FTA 협상은 ‘주고 받는’ 관계속에서 진행되며,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내용을 상대국에게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FTA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협정이 되는 것이다.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한미 FTA 협상이 부진한 것도 상대방에게 요구만 하지, 자국이 상대국에게 제공할 내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미국 양국은 금년 중으로 협정의 큰 틀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아래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협상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6차협상이 지난 5차협상과 같이 성과없이 끝날 경우, 한미 FTA 협상 타결은 당초 예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금년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선거정국으로 돌입할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한미 FTA가 정치쟁점화됨으로써 추진력이 약화될 것이다. 하지만, 잠재성장력과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재의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미국과의 FTA 체결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겠으며, 미국과의 대외협상과 더불어 국내 이해관계자 및 반대론자들과의 내부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때이다.\*